

[盧 前대통령 서거]

정치 일정 올스톱... 여론 동향에 촉각

親盧 회생 계기될까

‘박연차 게이트’ 정치적 파산... 결국 촉매제 될 수도

여야 ‘盧 서거’ 정국 대응찾기 부심

한나라 입조심속 ‘MB입법’ 계획 차질 우려 민주당 박연차 연루 현정권 인사 특검 부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정국이 급변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대처 방안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애초 정국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방법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었다. 누가 봐도 격렬한 대결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여론에 대한 책임 여론이 비등하면서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집권 2년차를 맞아 각종 개혁과제를 뒷받침 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비교적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내놓고 여권을 몰아붙일 수는 없다. 역풍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당은 24일 다음날로 예정됐던 양당 신임 원내대표 간 회동과 6월 임시국회 개회 등 정치일정 대부분을 연기하는 등 모든 정치일정을 중단한 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조문 행보’에 올인했다.

◇한나라당=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극도로 대응을 자제하면서,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

고 있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분간 ‘대책’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민심이 동요를 느끼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괜히 법안 처리를 위한 전략을 짜고, 또 여야 협상에 나서는 것은 여론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대신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애도했다. 또 이날 아침 당사 외벽에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의원들도 각자 사무실에 근조 현수막을 붙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 동요하는 민심이 안정돼 갈 즈음에는 애초 처리 계획했던 법안들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만 7월에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나 6월에 표결처리기로 한 미디어법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내심 유리한 정국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쉽게 나설 수도 없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두려운 것이다. 당 지도부는 당장은 애도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에 6월 임시국회 개회 연기를 요청, 합의를 이끌었다. 대신, 민주당도 장래 절차가 끝날 때까지 모든 공식, 비공식 정치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당분간은 중앙당과 지역시·도당 분향소 설치, 봉화마를 조문, 장례절차 지원 등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6월 중순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한나라당의 시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전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 등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현정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주장을 더욱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親盧 앞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갑작스러운 변고를 맞은 친노(親盧) 그룹의 향후 진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 전면에 나선 친노그룹은 ‘좌(左)회정-우(右)광제’로 불리는 이광재 의원과 안희정 최고위원 등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박연차 게이트’에 휘말려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서면서 정치적 파산 위기에 몰린 상태다. 무엇보다 이들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도덕성’에 치유하기 어려운 흠집이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를 계기로 당장 친노 진영이 정치 활동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한 386 운동권 출신 인사는 24일 “곧바로 친노그룹이 재결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극적 슬픔 앞에서 곧바로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한 친노 인사도 “역사적 비극 앞에서 다들 비통해하는 상황에서 막막할

따름”이라며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 자체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일”이라고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비극은 검찰의 칼날에 와해되다시피한 친노 진영이 다시 결속하게 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 방식을 통해 정치적 동지들을 짓눌렀던 짐을 떠안고 가는 듯한 상황이 조성됐고, 이는 국민 사이에 동정론을 불러일으키며 정치적으로 숨 쉴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특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맞춰 야권이 특검 추진 등 대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경우 친노 그룹이 자연스럽게 그 중심에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정치권설립단체 ‘포스’의 이경현 대표는 “국민 정서상 호신 상에 올랐던 인사가 자살했을 경우 그의 결백과 도덕성을 믿어주는 경향이 있다”며 “친노그룹의 정치적 회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습스



김형오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향하다 마을입구에서 노사모 회원 등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발길을 돌리고 있다. (왼쪽) 같은 날 봉하마을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헌화하고 있다. /연습스



김형오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향하다 마을입구에서 노사모 회원 등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발길을 돌리고 있다. (왼쪽) 같은 날 봉하마을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헌화하고 있다. /연습스

YS가 정치권 입문 이끌고 DJ와 정치적 신념 함께 해

전직 대통령들과 인연은

골목의 우리 정치사를 관통한 삶을 살다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보다 앞서 정권을 잡았던 전직 대통령들과도 정치적 동지이거나 정적의 재결집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도 기간이 끝난 뒤 “현 정권의 무리한 수사가 ‘화’를 불렀다”는 인식 하에 ‘반(反)MB전선’ 강화를 통한 세 결집을 시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 많은 동지들이 한나라당의 품으로 돌아갈 때 영남 출신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유일하게 DJ를 택했다.

DJ는 이런 노 전 대통령을 2000년 해양수산장관으로 발탁해 대선후보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노 전 대통령으로 맞서며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쌓았다.

노 전 대통령을 제도 정치권으로 이끈 사람은 김연중(DJ) 전 대통령이였다. 노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와 보스정치 극복을 위해 자신이 청산 대상으로 꼽았던 DJ와 손을 잡고 정치적 신념을 함께 추진했던 것.

90년 3당 합당을 거부, ‘포미주’ 당에 남았던 노 전 대통령은 DJ가 95년 정계에 복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야권분열에 반대를 곧바로 합류하지 않았지만 9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 관계복원 나서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민주당, 나아가 비노(非盧) 인사들과 노 전 대통령의 화해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비노인사들은 그 동안 노선과 정치적 행보 차이로 노 전 대통령과 절친 애증 관계를 이어왔다. 우선, 열린우리당 시절 국정 파트너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관계는 순탄치 못했다. 2005년 대연정 파문, 2006년 유시민 전 의원의 복지부장관 임명으로 시작된 인선 파동, 2007년 구어권 정계개편 등의 와중에서 양측은 사사건건 대립했다.

이후 비노(非盧) 진영을 중심으로 지난 대선, 총선 패배의 책임을 노 전 대통령에게 돌릴 정도였다.

특히, 정동영 의원은 2002년 대선 때 추미애

非盧·親盧 영정 앞에서 ‘화해’?

정동영·손학규·추미애 등 빈소 집결 애도

의원과 함께 노무현 후보 선대위를 이끈 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의장, 통일부 장관을 지냈으나 2007년 6월 탈당과 함께 비노 주자의 선봉에 섰다. 추 의원은 아예 2003년 분당에 반대, 열린우리당 합류를 거부하며 노 전 대통령과 갈라섰다.

더욱이 4·29 재보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수사대상에 올랐을 때에도 민주당은 “문제가 있으면 털고 가야한다”며 “거러 두기

를 시도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은 장례식 때까지 애도기간을 선포, 정치일정을 전면 중단하는 등 ‘상주(喪主)’를 자임한 모습이다. 또 정 의원, 손 전 대표, 김 전 의원, 추미애·전경배 의원 등 비노(非盧)진영 정치인들도 24일 노 전 대통령의 빈소에 집결하며 추모에 참여하면서 관계 회복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물론 비노인사들이 이를 계

기로 서로 구원을 털고 그가 남긴 ‘정치적 유산’을 재조명하는 관계복원을 통해 전통적 지지층의 재결집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도 기간이 끝난 뒤 “현 정권의 무리한 수사가 ‘화’를 불렀다”는 인식 하에 ‘반(反)MB전선’ 강화를 통한 세 결집을 시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 직통: (062)227-9600
· FAX: (062)227-9500

한정승인공고

광 노창욱 (580218-2063413)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재권지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재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나단630

공 고 인: 강성룡 (위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전경자 부 경이)

한정승인수리일: 2009. 5. 1
공고기간: 2009. 5. 25 ~ 2009. 7. 24
연 락 처: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288-8
강이차 (011-625-3318)

임아급매

전남 나주 남평읍 노동리 산 72
6800坪 도로접합

➔ 매가 1억

☎ 016-249-8656

7·9級 공무원 소직렬

3040 주부반모 집합회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 시험일: 6월 1일, 6월 2일 / 7월 7일 시험
· 시험장: 6월 1일 / 7월 7일 시험
· 채용인원: 7.9급 국가직 3~4명, 지방직 4~5명

개강
6월 1일 (주·야 합반 모집)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경 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개강 매월 초(합격시스템)

※ 6개월 과정 광주지역 서재형, 오경수 합체

6개월 과정
· 2개월 완성 3회 반복학습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합
· 수강료 25%(D/C) 교재 15%(D/C)

1년 과정
· 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
·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합
· 수강료 50%(D/C) 교재 15%(D/C)

합격매출 1위 교수진

영어 이발리
· 경찰 영어 70% 합격률
· 국공 영어 쉽게 강의
· 강의경력 15년

경찰학 오만
· 신 경찰감찰학 개론 직강
· 남부 경찰학원 전임
· 광주메가경찰학원 전임

수사 자주운
· 강의경력 22년
· 광주 순천 메인 전임
· 광주 메가 경찰학원 전임

합소팀 김현중
· 사시 1차 3회 합격
· 신남동법원 검찰수감장 10년 경력
· 형사법정재판이 학비무고자

경 찰 전문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 226-5050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SINCE 1965 학원설립인가

44년 전통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광주지역 3,200여명 1회~19회까지]

여성 최고의 전문직 아파트관리사장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개강 6월 1일 (첫전도 시역반)

국비지원 선착순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첨단점 ☎ 971-0002 광주은행 횡단점 4층